

이덕일의 '역사의 창'



전라도는 왜의 땅? '전라도 천년사' 유감

'전라도 천년사'라는 책이 있다. 전남·북·광주 세 지자체가 나란히 24억 원을 들여 34권으로 제작한 전라도역사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전해지자 '전라도오천년사'로 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등의 단체들에서 일제 식민사학의 관점으로 서술되었다면서 비판했고, 집필자들과 학술토론을 요구했다. 그런데 무엇이 쟁점이 학술토론은 거부되었고 e북으로 먼저 공개해서 수정 제의를 받기로 했다.

공개된 e북을 보니 학술토론을 거부한 이유가 납득이 갔다.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만들었다면 명실이 상부한 책이기 때문이다. 앞부분만 살펴봤는데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노골적으로 단군조선을 부인한 것(3권 44쪽)은 단군부인에 가장 열을 올린 세력이 조선총독부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자.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큰 역사관은 고대 전라도가 왜의 식민지였다는 인나일본부이다. 인나일본부설이란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인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한국학자들은 총론으로는 인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본론에서는 '인나=가야'라는 인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속여 왔는데 '전라도 천년사'가 그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895년 경복궁 담을 넘어 들어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야쿠자야

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역사연구 한답시고 '일본서기 조선지명교'를 써서 왜가 지배한 인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차지했다고 우겼는데, '전라도 천년사'가 '맞습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야마토왜의 식민지 기문에 대해 '전라도 천년사'는 "기문은 남원지역으로 비정하는 것이 확실하다(4권 57쪽)"라고 말했다. 기문이란 무엇인가? '일본서기' '계제(繼體) 7년(513)' 조에는 신하인 백제왕이 황제인 왜왕에게 오경박사 단양이를 바치면서 '반과국이 신의 기문망을 빼앗았으니 하늘의 은혜로 돌려주소서'라고 빌었다고 나온다. 그러자 왜왕이 '은혜로운 조칙을 선포해서 기문을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것이다. 왜왕이 자기 마음대로 주었다 뺏을 수 있는 기문은 전복 남원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기문을 남원이라고 우긴 인물은 조선총독부의 이마니시 류(今西龍)였다. 그가 1922년 '기문반과교(己文件破考)'라는 허접한 논문에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은 섬진강 유역에 있는 남원에 해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아무런 사료적 근거 없이 우긴 것을 '전라도 천년사'가 '맞습니다'라고 계속 머리를 조아리는 중이다.

야마토왜의 식민지 인나 4천도 전라도에 갖다놔다. 인나4현은 '일본서기' '계제 6년(512)' 조에 백제에서 왜에 세금을 바치면서 '인나국의 상다리·하다리·사타-

모루 4현을 하사해주소서'라고 빌자 왜왕이 갑을스렵게도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곳이다. 북한학계의 김석형은 60년 전인 1963년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분국설'이란 논문을 통해 인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열도에 진출해 세운 분국이라고 분석했다. 기문은 물론 인나4현도 모두 일본 열도에 있던 가야계 또는 백제에게 세운 분국(分國)이라는 것이 북한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전라도 천년사'는 "일본학자들은 (인나4현을) 주로 영산강유역에 비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학자들은 주로 전남 동부지역으로 비정하는 경향이 있다(4권 55쪽)"면서 전라도가 왜의 식민지라고 서술했다. 북한의 가야사연구자 조희승은 '일제 어용사들이 지배주의 관점에서 가야의 영역이 전라도 충청도까지 포괄한다는 억지주장을 했다(조희승, 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60쪽))'고 비판했는데 '전라도 천년사'가 그 일제 지배주의 관점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전라도 천년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논뜨고 못 볼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전봉준·손화중·김계남의 동학3대장을 배출한 전라도가 어쩌다 왜의 식민지가 되었나? 전 도민이 지켜보는 '공개 학술 토론회'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동학, 의병, 독립전쟁 때 목숨 바친 수많은 호남인들의 순국정신을 모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기고

한반도 평화 위한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정상회담은 외교의 빅 이벤트이다. 기대가 크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최근 국가간 현안이 산적해 있고, 어떤 의제를 다룰지 구체적인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12년만의 국민 방미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경제와 안보다.

첫번째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전환하여 대화와 관계 정상화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고 억지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긴장도 우려가 크다.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문건에서 나온 한국산 포탄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시 한국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폴란드 총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지원에 미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지원을 요청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지 전쟁이 아니다. 두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전략산업을 지켜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세계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열렬한 경쟁중이다. 이제 글로벌 경쟁구도가 치열해진 만큼 더 이상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싸울 수는 없다. 국가가 나서서 전략산업을 지켜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리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일체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보조금 회수 판단을 위해서 우리 국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우리 기업에게 경영상 기밀정보 등 핵심정보까지 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주력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자산업계의 볼트와 너트에 비견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가안보 우려 명분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에 적용대상이 되는건 억지스런 부분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서 배제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작년 10월부터 미국기업 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일본의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회사들의 중국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40%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중인데, 다행히 1년간 생산장비 수출규제를 유예 받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규

제 대상이 된다. 유예조치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십조 원 가치의 공장은 기술과 생산장비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해 수년내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올해 9월 종료되는 수출규제 유예기한을 재연장하거나 규제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외국 우려단체'에서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외국 우려단체'로 중국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부품과 핵심광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배터리와 전기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제한 비중을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조율해야 한다. 최종 조립지가 미국 및 FTA체결국으로 한정하는 부분도 완화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최소한 완공시점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완화하는 조항을 이끌어 내기를 우리기업은 절실히 바라고 있다.

광복 이후 미국을 국민방문 했던 이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전략적으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주고 와서 실속이 크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일방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반하장적 태도에 국민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으며,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도청 의혹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도 커지고 있다. 동맹국 도청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언론에서 바라본 한국의 성과는 미국측 입장에서 "통근 열대"이었다는 긍정적 평가 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적 평가 나오길 바란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의 선전을 기대한다.

의료칼럼

만성 피로



백상철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항상 피곤해요",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라고 호소하며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피로는 몸이나 정신이 지쳐있는 상태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했다. 일반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되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이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에 해당한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이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피로 이외에도 노력 후 불쾌감, 상쾌하지 않은 수면, 다발성 통증과 같은 증상과 함께 단기 기억력 또는 집중력의 현저한 저하, 운동-감각 신경 장애, 빈번하게

반복되는 인후통, 위장 장애, 복통, 흉통, 식욕 부진, 오심, 호흡 곤란, 체중감소, 우울감, 불안, 체온 조절의 불안정성, 높은 감염 감수성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유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러스 감염, 면역기능장애, 저혈압, 영양결핍, 신경호르몬계 이상, 중추신경계 이상, 스트레스 등이 유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만성 피로의 유행률은 조사 방법과 대상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인구 집단의 약 1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미국 국립 의학 아카데미 의학 연구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8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지속적인 피로로 인해 일상 생활에 제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17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고됐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검사법은 아직 없다. 진단은 병력 청취, 임상증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이뤄지며 일반혈액검사, 혈청 전해질 농도, 공복식 혈당, 간기능검사, 갑상샘 기능검사, 소변검사, MRI 등 적절한 검사를 통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나 환자 증상개선에 비교적 효과가 있고, 연구 결과가 축적된 치료법으로는 인지행동 치료와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치료가 있다. 증상에 따라 환자 개개인의 신체 및 정신 활동의 한계치를 파악해 한계 범위 내에서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

한다. 다발성 통증이 있는 경우 스트레칭, 운동요법, 물리 치료요법, 추나요법, 침 치료를 통한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올바른 수면 습관을 반드시 지키고, 30분을 넘지 않는 낮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제, 잠들기 전 카페인, 술, 식사의 제한이 요구된다. 기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첩, 다이어리 등과 같은 기억 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심혈관 질환이 없는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경우 일일 수분 및 소금 섭취량을 늘리고,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을 통해 기립성 조절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평소 즐기는 취미 활동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의학에서 만성 피로는 허로(虛勞), 비로(疲勞), 연라증(軀癱瘓) 등의 범주에 속한다. 변증에 기반해 비기허증, 간비불화증, 심비양허증, 기혈양허증, 간신음허증 등으로 분류해 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물리 치료, 상담 및 교육, 추나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매선침, 이침, 기공, 향기요법, 음악치료 등도 사용되고 있다.

피로감이 지속되고 휴식이나 수면을 통해 피로가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社說

'돈 봉투 의혹' 민주당 뼈 깎는 혁신이 살길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로 위기가 깊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이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전격 탈당과 동시에 조기 귀국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형국이다. 하지만 추가 대응책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불법 정치 자금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정당 혁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갈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의원에 할당된 전당대표 비중(45%)을 대폭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제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두 사람이 결사해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출당이나 제명 같은 대항 조치를 먼저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한편에선 전수 조사나 자체 진상 조사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제력이 없으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겹치면서 현재 거론되는 수습책만으로는 국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혁신의 바람으로 민심의 신뢰를 회복해 위기를 타개하자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 개혁안도 필요하지만 반성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 혁신으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천 물줄을 재검토해야 한다. 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혁신만이 위기를 타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증하는 10대 차량 범죄 예방 대책 서둘러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대들의 차량 범죄는 무면허가 기본이고 절도에 과속 주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주일 사이에만 광주에서 3건의 10대 차량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중학생 2 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경주까지 300km를 주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19일에는 15세 중학생이 도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25일 새벽에는 13세 중학생이 수원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쏘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학생은 오토바이 주인이 수납장에 둔 스마트키를 알고 버튼만 눌러 바로 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톱존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등하교 시간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

남에서만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20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만 통계를 포함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친구들과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 차량 범죄에 빠지기 쉽다. 몰래타는 특성이 강해 차량 범죄를 저지르때도 혼자인 경우가 드물다. 25일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학생도 CCTV를 보면 절도 당시 2 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요즘 10대들은 축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할 정도로 영악하다. 차량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를 낸 후 만 14세 이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로 다루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환해 안전운전 기본교육과 차량 절도 시 법적 처벌, 운전자의 자격이나 가차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無等鼓

왕(王)은 군주나 임금을 뜻하는 말이다. 갑골문자로 왕의 아래 변이 넓고 위는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데, 고대 최고 권력을 가진 도끼가 왕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높은 분'이라는 의미의 이 왕에 대한 용어는 국가마다 각기 달랐다. 영어로는 킹, 독일어 케니히, 프랑스어 후아, 러시아 차르, 스페인어 레이, 아랍어 술탄 등이 같은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에서는 단군, 고구려 개차, 백제 여라하, 신라 마립간 등을 쓰다가 통일신라, 고려에 들어

서 왕 칭호를 썼다. 현대 우리나라에서 주로 스포츠에서 좋은 의미로 왕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득점왕, 타점왕, 홈런왕, 도움왕 등이 대표적이다. 한 분야에서 업적을 낸 경우도 쓴다. 보현왕, 판매왕 등이 그렇다. 최근 신문·방송에는 주택왕,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공인중개사와 짜고 수백 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꾼을 이렇게 부르기도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서민이다. 추악한 범죄자인 그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

전세 사기 공범

뒤늦게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

이 보장된 공공 임대 주택이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미흡한 현재의 공공 임대주택의 전면

적인 혁신 대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임대업자, 건설업체에게 주택 문제와 도시공간을 맡겨 놓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입해 사회적약자, 서민 등을 위한 주거 시설을 공급하고,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과 시설들을 조성해야 한다. 투기세력에 의해 터무니없이 올라간 민간 아파트 가격도 정상적인 범위로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반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